“교육, 균형발전·저출산 해결책… 지방 로컬 브랜드 키워야”

尹, 교육·문체부 정책방향 보고받아
“성장 잠재력·경쟁력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다양성”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는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다”며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이라는 건 누누이 말했지만, 지방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에 있어서도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의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며 “문체부에서는 소위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교육과 관련 국가나 정부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콘텐츠나 시스템, 특정한 종류의 학교 체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며 “과거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절에 국민들의 문맹 해소 등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학교도,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된다”며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나 용역이라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돼야만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교육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디지털 심화와 AI(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디지털 기기로 얼마든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은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나가는 것”이라며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교육 현장이 디지털에 적응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양산해 우리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되는 책임을 교육이 맡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 목표에서 또 하나의 중요 어젠다는 ‘돌봄’을 꼽으며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도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사람을 돌본다는 건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과 관련 “우리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분야기 때문에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을 제도를 잘 설계해 각 분야에, 디지털 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체부를 향해서도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자체의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尹 정부 신뢰 잃어… 추경호 등 경제라인 개각 필요”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간담회
“작년 한국경제 가장 큰 피해 입어
고금리·고물가 맞춰 해법 내놔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이원영, 오기형, 홍성국 위원, 김 위원장, 김성환, 홍기원, 이용우 위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경제 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 교체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가 키운 자금시장 경색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윤 대통령의 언행이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정책은 신속하게, 지원은 과감하게, 책임은 확실하게”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세가지 제안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 개각으로 시장 신뢰 회복 ▲유연한 재정정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 ▲남북의 길어지는 대치관계 해소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자고 했다.

민생경제대책위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작년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전년 말 대비 2022년에 코스닥(-34.3%), 코스피(-24.9%), 한국국채(-8.5%) 등 자산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자산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또한 2022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가계 부채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신호’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관돼 있어서 위험하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연간 가계 이자부담은 두 배로 올랐다. 전체 소비 중에서 5%였던 이자 부담이 이제 10%에 육박한다. 이자를 5만원 내던 것을 10만원을 내면 5만원 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며 가계부채 부담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홍 의원은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비롯해 건설 전 과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을 때가 지난해 12월 1일이라며 미국(10월 5일), 유럽(10월 13일), 중국보다(11월 7일)보다 약 두 달 정도 늦은 점도 지적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지면 기업들은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2022년 9월 28일) 이후 한국의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착륙하던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홍 의원은 ▲주요 투자은행(IB)의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안보 불안, 전쟁 가능성으로 투자가 위축된다는 외신의 평가 ▲불황이 찾아온 K-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역사상 최저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중인 금리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거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17일까지, 10일 연장

여야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2023년 1월 8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조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봤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장 처리를 위해 1월 6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 및 세부 증인 채택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활동기간이 10일 연장됐으니, 여야는 3차 청문회 세부 증인 채택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경선 불출마 선언

“불필요한 오해 우려에 여론 수용”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차기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군이었던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차기 당 대표 리더십으로 ▲대권 욕심보다 당 이익이 앞서지 않는 것 ▲강력한 대야 투쟁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 ▲대선 승리를 이끈 아젠다(여성가족부 폐지, 한미동맹 강화 등) 계승 ▲보수 정당 정체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할 차례”라며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 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있는 ‘민주당 흉내 내기’부터 걷어내고,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